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



▲ 지난 11월 1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김 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살충제 검출 파동의 원인과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에 관해 정부·소비자와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계란 산란일자 표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본회 이홍재 회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 식

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좌정호 과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본회 남기훈 부회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상호 연구관, 한국양계농협 김진석 경제사무, 농축산식품경제연구소 김재민 실장이 패널로 나섰다.

한편,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와 생산자, 학계, 행정부(정부)가 모이는 뜻 깊은 자리로써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산란일자 표기, 유통 시스템 내 냉장 보관 의무화, GP 센터 강

화, 협동조합식 방식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된 건전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 '계란 산란일자 표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란일자 표기는 계란 안전성 확보의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산란일자 표기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계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육여건이 다르고 계란을 수집하는 시기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난각에 산란일자만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에 가까운 구매를 하려고 할 테고 이에 생기는 잉여산물이나 재고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계란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한 냉장 유통과 함께 GP 센터를 설치하여 계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흥 재 회장
(사)대한양계협회

토론



◀ 좌부터 한국양계농협 김진석 경제상무,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태복 과장, 본회 이흥재 회장,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좌정호 과장, 본회 남기훈 부회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상호 연구관, 농축산식품경제연구소 김재민 실장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가 산란일자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계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구조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산란일자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가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만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산란일자와 소비기한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제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훈 부회장(대한양계협회/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소비자에게 좋은 계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만, 산란일자 표기와 계란 신선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 신선식품에 개체별로 생산일이나 채집일을 표시하는 식품이 없습니다. 이는 무리한 요구로써 이러한 방법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이나 냉장 방법을 고민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부작용과 산업 현황을 고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김진석 경제상무(한국양계농협)

이제까지 산란일자 표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협은 계란을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90일입니다. 계란품질은 주령 수와 유통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산란일자 표시가 대안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없는 계란이 소비되지 않아 결국 가공용으로 쏟아지고 GP 센터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란일자만 표기하게 되면 결국 생산자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계란을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민 실장(농축산식품경제연구소)

제조 일자리를 표시하는 서울우유도 한 기업이 진행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전체 계란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란일자 표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등급판정제도’의 무화를 통해 언제 산란이 되었는지보다 농가와 유통업자가 얼마나 신선하게 계란을 관리하는가에 중점을 두게 되면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하여 계란의 품질도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호 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산란일자 표기와 계란의 안전성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좋은 계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소비자들은 신선도보다는 계란의 상태 또는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계란은 신선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식품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통권장기한’을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사용하지 말자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금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 앞서 거론된 GP 센터 설립, 계란 이력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요.



좌정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계속된 사건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란일자 표기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미 일부 법과 제도는 개정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정리/임설희 기자 wg1167@hanmail.net)